

CCTV 전능시대...안전-인권 '조화가 필요해'

광주통합관제센터 7369대 운용 고화질에 매년 1000대 이상 늘어 범죄·교통사고 예방 등 일등공신 코로나 무단 이탈 단속도 한몫 속 사생활 노출 '감시 사회' 우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지난 2일 오후 5시께 전남대병원에 입원중이던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A(여·40)씨가 사라졌다.

A씨는 3시간 만인 오후 8시께 차평동을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광주시통합관제센터 내 CCTV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

광주시통합관제센터는 A씨 인상착의와 예상 이동경로 등을 파악한 뒤 CCTV를 따라가며 A씨를 찾아냈다.

7369대. 광주 곳곳에 설치된 '감시의 눈', CCTV 숫자다.

'방범용'으로 설치되더니 올해 현재 기준 7000대가 넘는 카메라가 골목마다 걸려있다. 주택가 골목을 비롯, 도심 공원과 도로변 등 없는 곳이 없다. 매년 1000대 이상이 추가되는 실정이다. 초고화질 카메라 영상에다, 휴대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통신·금융자료들을 종합·분석하면 개인정보들을 들여다보는 게 언제든 가능해졌다. '감시사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10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모두 7369대. 유형별로는 방범용이 3880대로 가장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2566대. 두 번째다.

초등학교 내에도 64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촘촘하게 지켜보고 있다. 차량번호만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117대는 도심 곳곳에서 범죄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재난수집용 55대·교통정보수집 107대 용 카메라도 '눈'을 번뜩이고 있다.

'감시의 눈'은 매년 촘촘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4790대던 CCTV는 지난 2019년 6262대로 늘었고 올해 다시 7369대까지 확대됐다. 매년 1000대 이상이 추가 설치되고 있는 셈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조금씩 늘리는 모양새다.

화질도 선명하다. 7369대 중 92%(6826대)가 200만 화소 이상이다. 카메라로부터 2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표정까지 살필 수 있는 해상도다. 디지털 줌을 사용해 200m 떨어진 바닥에 놓여있는 지폐 숫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관제센터측 설명이다. 영상 내 어떤 영역을 확대해도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도시 모니터링에 탁월한 수준이다.

당장, 치안 확보에는 더 없이 유용하다. 지난 9일 밤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돼 곧바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2일 밤 11시께 상모고 인근 무지개 어린이공원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 피우던 젊은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의 내부 모습.

층 모습도 포착됐다.

동시간대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센터는 CCTV를 통해 2018년 431건, 2019년 456건, 지난해에는 668건에 이르는 범인검거에 방 활동을 펼쳤다고 했다.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는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17명이 5조 3교대로 24시간 모든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최점단 CCTV가 찍는 영상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센터측은 일단 영상 보관 기간은 한 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민 참여자 21 대표는 "도시생활은 불안하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CCTV는 필요하다. 다만 안전에 대한 문제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라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여부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힘내요, 미안마" 10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안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광주-미안마 유학생 대표 사사(21)씨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한 뒤 안아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해물질 배출 노후 쓰레기 수거 차량 대책 '숙제'

폐암 걸린 순천시 환경미화원 법원 "지자체 손해 책임" 판결 매연 저감장치 등 대책 마련 필요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 차로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소속 미화원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할 숙제를 안게됐다.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다.

10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판사는 최근 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항소, 상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일하다 폐암진단을 받은 순천시청 환경미화원 A(66)씨와 B(사망 당시 65)씨 유족들이 순천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200만원, B씨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순천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2주 이내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최종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업무 중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 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도 순천시가 유해환경에서 보호할 안전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A씨는 지난 1990년 6월부터 순천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7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아 투병중이고, B씨는 1996년 9월부터 근무하다 2017년 9월 폐암을 진단받았고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앞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을 신청해 각각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20년이 넘도록 순천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점을 인정해 도의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직업성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는데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직업성 질환 산재에 대한 손해 책임이 인정되면 산재신청이 줄어 있다는 점과 당사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점 등으로 지자체들은 책임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게 노동계 입장이었다.

김성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지자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만 관심이 쏠리다보니 지자체의 방지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지자체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산재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모두 189대의 쓰레기 수거·운반 차량 중 27대가 디젤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없이 운행중이다. 순천시에는 12대의 차량 중 7대가 천연가스, 5대는 디젤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